

영남인사 우대, 호남 소외현상 여전히 반복

박대통령, 청와대 비서진 인선 들여다보니 비서관 내정자 30명 윤곽...친박 측근·대선캠프·인수위 출신이 장악 호남, 문재도(보성)·김재춘(광주)·조인근(영암)·최수규(전주) 4명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마무리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영남 인사 우대와 호남 소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비서진은 대체로 대통령 측근 그룹, 대선캠프 실무 그룹, 인수위 출신 그룹, 경제기획원(EPB) 출신 그룹 등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남녀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비서관의 세부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26일 인사비서관에 김동국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국정홍보비서관에 백기승 전 대선캠프 공보위원, 외교비서관에 김형진 외교통상부 국장,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전비서관에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국방비서관에 연제욱 국방부 정책기획관, 통일비서관에 홍용표 한양대 교수, 과학기술비서관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이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언론에 알려진 비서관 내정자는 전체 41명 가운데 30명 정도다.
이들 중 고향이 확인된 비서관은 26명이었으며 이 중 문재도(보성) 산업통상자원비서관, 김재춘(광주) 교

육비서관, 조인근(영암) 연설기록비서관, 최수규(전북 전주) 중소기업비서관 등 호남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 반면, 영남 출신은 대구·경북 4명과 부산·경남 4명으로 8명이 나왔다. 또 서울 출신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명, 대전·충청 3명이었다.
지역과 관련 없이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 측근들로 채워졌다.
총무 이재만 전 보좌관, 연설기록 조인근 전 대선캠프 메시지팀장, 1부속 정호성 전 비서관, 2부속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이 총무, 정 1부속, 안 2부속 등 비서관 내정자 3

명은 박 대통령을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조 연설 기록비서관 내정자는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당했고,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지낸 측근 그룹이다.
정무수석실의 김선동 정무비서관 내정자는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전 의원이다.
비서관급에는 인수위 출신들이 가장 많았다.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내정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 내정자와 조영천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또 오근 국정경제비서관 내정자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내정자, 장진규 과학기술비서관 내정자, 김용수 정보통신비서관 내정자, 김재춘 교육비서관 내정자, 연제욱 국방비서관 내정자, 홍용표 통일비서관

내정자 등도 모두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은 측근 그룹과 인수위 출신 그룹이 섞여 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이 이어 '대통령의 입'을 맡게 됐고, 대선 캠프 공보위원을 지낸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은 2007년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다.
최상화 총추광장 내정자는 측근이자 대선캠프에서는 지능총괄단장, 인수위에서 취임준비 실무단장을 거쳤다.
경제기획원(EPB: Economy Planning Board) 출신도 비서관에 2명이나 내정됐다.
주형남 경제금융비서관과 홍남기 기획비서관 내정자는 EPB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주원동 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EPB 출신이 중용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개 정상급 인사·사절단 만나 바쁜 '취임 외교행보' 이어가

박대통령 취임 이틀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26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방한한 19개 정상급 인사와 사절단을 만나 '취임식 외교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톰 도널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이끄는 미국 특사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공조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던 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박 대통령은 도널던 보좌관에게 "당선 직후에 백악관에서 축하 성명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번에 대표단을 파견해주시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등이, 미국 측에서는 성 김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제임스 서번햄 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류연동 중국 국무위원, 이 사예프 러시아 극동개발장관 등 3강

사절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미 특사단을 접견함으로써 '취임 4강 외교'를 마무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선달 덴마크 외교부 장관, 피오리소 프랑코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스와이어 영국 국무장, 코시 독일 재무차관 등과 부디오노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잇따라 만났다.
앞서 박 대통령은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과 정상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총리가 북핵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하퍼 총리의 방한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 방한하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도 후쿠다 야스오·모리 요시로 일본 전 총리, 쿠엔틴 브라이스 호주 총독 등과 잇따라 만났다.
박 대통령은 후쿠다 전 총리 일행과의 접견에서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일행인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총회장에 게는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의원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인사권 행사 대상자는 몇명일까 장·차관 등 행정부만 1200여명 대략 6000~7000명 육박할 듯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얼마나 될까. 현행법상 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원칙적으로는 대략 6000~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과제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속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특정직(경찰,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행정부의 4급 이하 공무원의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 직접 대상이다.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 1~3급 등 1200여명이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 이외에 검찰, 경찰,

소방직공무원, 의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약 4800여 명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의무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된다. 국립대 총장 4명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정과제위원회의 경우 새 정부에서는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만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1200여명이었던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상당수 위원회가 조정될 수 있어 숫자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핵심 인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3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책임장관제를 하기로 했고 그 핵심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부 장관에게 실질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 장·차관급 정무직 1200여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제경찰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이 포함된다.
행정부와 대통령 직속기관 이외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도 대통령의 인사대상이다.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17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기관 29개 등 총 46개 기관의 80여명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26일 제18대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필뉴스

여야, 조직개편 협상 교착 상태

방통위 기능 이관 점점 못찾아 3월까지 장기화 가능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내각 공백의 장기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미 1차(14일)·2차(18일)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인 방통위 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차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최종 쟁점은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비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통통신 융합을 기반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이동지도사	3.7(목)오전	•한자의 기본원리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부수해설·시자소학 •명심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소학·대학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총장)	3.6(수)오전	•논어·맹자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명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강료: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종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물관리협회부근)
E메일: hanja-exam@hanmail.net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투자 하실 분

▶물건: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1억원 이상
▶기간: 1년정도
▶수익: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NPL과 특수물건
▶시간: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